

한병도 “중수청법, 檢 수사권 우려… 종합특검법 15일 처리”

민주 원내대표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당정 이견 있어 논의”
수사 기간 170일·인력 156명…법 개정해 내란 사범 사면 차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종합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특검법 처리가 국정 혼란과 내란을 수습하는 길”이라며 “지금 나타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회동에서도 “내란을 종식하고 파괴된 헌정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락드려 만나볼 계획이고, 우 의장이 (여야 회동을) 주재한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김여준의 검은소함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6면>

그는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지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동조했다.

공천현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결론 여부에 “윤리감찰단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오늘 본인이 윤리심판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최종 법안은 확정 안 됐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수사해야 할 건이 100건 더 나온 것 같다”며 “3개 특검을 합치면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번에는 (2차 특검의) 기간도 170일 정도로 하고, 수사 인력도 최대 156명까지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특검을 통과시켜 내란을 종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내란을 기획·지시·은폐한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봉쇄 하겠다”며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광주시당, 전국 첫 지선 공천 설명회

DJ센터 300여 명 몰려 ‘성황’…자격 심사 등 ‘공천 룰’ 안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전국 17개 시·도당 가운데 첫 후보자 추천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를 가동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2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301호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설명회’를 개최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지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출마를 희망하는 입지자와 선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몰렸다.

‘덧발’ 광주에서의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고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후보 등록 시즌을 앞두고 입지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검증 절차와 ‘공천 룰(Rule)’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당 가운데 최초로 열린 이번 설명회

는 예비후보자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시당의 의지가 반영됐다.

시당은 설명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자격 심사 신청 매뉴얼, 자격 심사 세부 기준, 공천 심사 시 적용되는 가산점 및 감산점 평정 기준, 향후 공천 관련 주요 로드맵 등을 안내했다.

입지자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서류 준비 유의 사항과 결격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그만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는 뜻”이라며 “공정과 혁신을 원칙으로 검증 과정을 강화해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진숙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통령 지원 의지 강력”

“대기업 유치 위한 산단 조성·공공기관 이전 계획 마련”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은 12일 광주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육을 먹더라도 광주·전남을 반드시 챙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기업 유치를 위

해 200만~3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직접 기업들에 제안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통합이 이뤄질 경우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은 “형식적인 시·도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전제된 통합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대표성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원 61명,

광주시의원 23명이 각각 구성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지금 아니면 (통합)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며 “우선 큰 틀을 만들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기로 한 지침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 경험에 있는 인사들은 최소한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도선인 기자 sunin@

국힘, 또 당명 교체한다

尹 탄핵 여파 지방선거 패배 우려…의견 수렴 등 다음달 확정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 등으로 지방선거 패배 위기에 내몰리자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위기 돌파 카드로 당명 개정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에 더해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명 교체 의견이 우세한 데 따른 조치다.

ARS 조사에서 전체 책임당원 77만4000여명

중 25.24%가 응답, 이 중 13만3000여명(68.19%)이 당명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책임당원을 상대로 동시에 진행한 새 당명 제안 접수에는 1만80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은 이날 오후부터 주말까지 전 국민 대상 ‘당명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설 연휴 전까지 당명을 개정하는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로써 2020년 9월 초 내걸었던 ‘국민의힘’ 간판은 내달 교체가 확정되면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사고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